

‘지역의사제’ 지정 일반고 1112곳… 부울경 282곳 ‘최다’

2027 대입, 32개 의대전형 도입 추진
중·고교 이력으로 지원자격 부여
경인 118곳… 남양주 20곳 지정
비평준화·농어촌 학교 비중 높아
“중2·중3부터 고교 선택 고민 ↑”

지역의사제 지정 일반고가 전국 1112개교로 집계된 가운데, 지정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과 가까운 경기·인천·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남양주와 인천, 천안·아산 등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중학생 단계부터 고교 선택과 지역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9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 일반고는 전국 1112개교로, 이 가운데 부울경이 28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 230개교 ▲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경기·인천권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시스

전체로 보면 994개교가 지정돼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고가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에 입학·졸업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

비 등이 지원되며, 졸업 후에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전형 구조 속에서 지역별 지정 학교 분포에 따른 수험생 이동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경인권의 경우 전체 일반고 480개교 가운데 118개교가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이다. 경기 86개교, 인천 32개교로 구성

됐으며, 경기 남양주권이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권 25개교 ▲인천 서북권 19개교 순이었다. 단일 지역 기준으로는 남양주시가 20개교로 가장 많았다.

지정 학교의 유형을 보면 비평준화 고교와 농어촌 대상 학교 비중이 높았다. 경인권 지정 학교 118개교 중 86개교(72.9%)가 비평준화 고교였고, 48개교(40.7%)는 농어촌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 지방권에서도 지정 학교 994개교 중 472개교(47.5%)가 비평준화 고교, 356개교(35.8%)가 농어촌 대상 학교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역시 주목 대상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아 실제 지원자와 이동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천안과 아산, 남양주, 부산 일부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집중돼 있어 향후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자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인권에는 성균관대 의대를 비롯해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등 최상위권 의대가 밀집해 있어 지역의사제 전형

이 본격화할 경우 해당 권역에 대한 수험생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지정 고교를 중심으로 진학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증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이어질 경우, 현재 중2·중3 학생을 중심으로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 선택 단계부터 향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지정 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 농어촌 전형 등이 중첩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학교와 지역에서는 의대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권 학생들 역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경인권이나 충청권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실제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치’

경기평택항만공사, 95만6천TEU 기록
중 비중 82%로 대중국 무역 거점 입증
해외 마케팅 성과, 2026년 세일즈 확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 김금규)는 2025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95만6,031TEU를 기록하며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국내 4위 국제무역항으로,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2024년 92만4,758TEU에서 2025년 95만6,031TEU로 3.4% 증가하며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같은 기간 부산항은 2.0%, 광양항은 2.4% 증가한 반면, 인천항은 73.2%, 울산항은 13.4%를 기록해 국내 5대 항만 가운데 평택항의 성장세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78만6,921TEU로 전체의



평택항 전경.

82.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베트남 6만9,008TEU(7.2%), 필리핀 5만5,419TEU(5.8%), 태국 1만6,834TEU(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택항이 대중국 무역의 핵심 거점 항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이 물동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5년 스

페인 바르셀로나 포트세일즈를 시작으로 중국 양포항 경제개발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평택항 설명회 개최, 네덜란드 TOCEU ROPE 참가, 중국 칭다오·웨이하이 포트세일즈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일즈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왔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내외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 물동량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2026년에도 물동량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6년 3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MIPIM 2026’에 참가해 평택항 홍보와 투자유치 등 지속적인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 일자리센터 통해 2207명 취업 연계

경기 둔화 속 ‘맞춤 고용지원’ 성과
고용 분야 정부합동평가 S등급

파주시가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둔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취업률 제고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총 2,207명의 구직자를 일자리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구직자 특성과 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상담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인정받아 파주시는 고용 분야에서 4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

대규모 채용 연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3일 금촌다

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파주시 더 큰 채용박람회’에는 35개 구인업체와 1,051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통해 20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장 취업률은 68.4%에 달했다.

정기적으로 운영된 소규모 채용 프로그램도 안정적인 고용 성과를 뒷받침했다. 연 4회 개최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44개 업체와 588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212명이 취업했으며, 상설·동행 면접 47회를 통해서도 187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인공지능 기반 모의면접 프로그램에는 175명이 참여했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11회 운영해 222명이 상담을 받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최대 7.2% 인상

1인가구 41만원·4인가구 103만원
청년 소득공제 34세까지, 60만원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7.2% 인상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생업용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차량 재산 기준도 완화된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올라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인상됐다. 4인가구의 경우 최대 6.5% 올라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상향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된다.

/이현진 기자

고양,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3차 확대 추진

3차는 중견기업 본사 유치 초점
제조본부 등 6개 업종 추가 허용

고양시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3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고양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중점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 핵심 기업 유치 시설로 육성해 왔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한 데 이

어, 2025년 2월 2차 입주업종 확대를 단행했다. 그 결과 공실률이 높았던 덕은·항동지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점차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3차 확대는 고양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초점을 맞췄다.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추가로 허용된 입주 업종은 모두 6개로, 제조업 회사본부와 기타 산업 회사 본부 가운데 중견기업 이상 본사를 비롯해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고교 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